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인천, 경기지역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인천, 경기지역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형태인 통합교육보조원 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자료에 적합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였고, 지역자활센터 30개소와 자활사업 참여자 347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여자가 수급자가 아닐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인지할수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높았고, 1인당 교육비 투입액수가 높은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일수록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1인당 교육비 간,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보장되면서, 많은 교육비 투입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때 자활사업 탈피의 가능성이 높아짐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탈피와 관련하여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 특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의 정책적, 실천적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제어] 자활, 근로연계복지모델, 통합교육보조원, 지역자활센터, 다층분석

엄 태 영 (Um, Tae-young) *

(E-mail : bokjisano1@gmail.com)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1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5일

*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단계별 상생을 통해 자활사업의 완전 탈피와 궁극적으로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엄태영, 2004). 하지만 자활사업의 일차적 성과인 자활공동체¹⁾ 수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620개, 참여자 수는 7,649명인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짧은 역사를 감안하고서라도 그동안의 투입에 대한 결과로서는 적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근로유인 부족과 급여지급방식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 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자활사업 아이템 선택, 그리고 무리한 일반 노동시장 재진입 추구가 혼합된 결과로 지적된다(엄태영, 2009). 따라서 자활사업 아이템의 다양화, 즉 기존의 소득과 근로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부터 보호된 시장이나 공공영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제도화가 시도되어져 왔고(신명호, 2007) 그 과정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이 바로 통합교육보조원²⁾ 자활사업이다.

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은 시작 초기만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³⁾처럼 공동창업형태인 자활공동체나 일반 노동시장

- 1)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계층이 조합이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빈곤탈피를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 2) 통합교육보조원이란 “특수교사 혹은 일반교사의 감독 하에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적 협력자”로 규정하고(교육인적자원부, 2002)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03년도부터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신현옥 외, 2005). 채용관련 조건으로는 우선 필수기준으로 고졸 이상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고, 권장기준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유경험자 또는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학과 출신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발달장애아 부모대학 졸업생,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고 60시간 이상 특수교육관련 이수자이다.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189

취업이 어려웠으나, 2003년부터 시작된 교육인적자원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부)의 각급 학교 및 복지기관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통해 자활사업을 거쳐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2006년 이전까지 자활사업 내 교육부 보조원 취업자 전체 수가 83명 정도였으나 2007년도에는 한해 취업자 수가 173명에 이르는 등(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08년 내부자료) 그 성과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 취업 이외에도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서비스 바우처 사업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 빈곤계층이 자활사업을 탈피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의 자활사업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자활사업 민간 최일선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를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의 상이함으로 인해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엄태영,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형태인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을 탈피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참여자 개인 측면과 지역자활센터 조직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다층구조(multi-level)분석을 통해 동시에 분석하였다. 특별히 근로연계복지모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활사업 탈피 요인들을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과 지역자활센터 조직 특성을 주요 변수로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인 것에 반해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낮으나 사회적으로는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개발하고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진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190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집

본 연구는 자활사업 탈피라는 궁극적 성과를 다루었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형태 중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자활사업에 대해 자활사업 탈피와 관련한 참여자 개인요인과 지역자활센터 요인을 동시에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자활사업 탈피 이후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도 탈피하였는지는 다루지 못하였고,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와 특성이 다소 다를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II.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1. 근로연계복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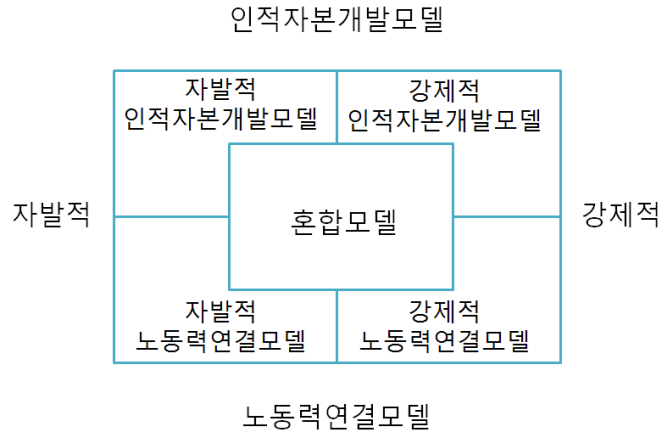
1980년대부터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근로능력을 보유한 빈곤계층을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대체로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지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떠한 일자리로든 취업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 편입을 목표로 하는 노동력 연결모델(labour force attachment model)과 근로능력의 장기향상을 통해 복지수급의 완전 탈피를 추구하는 인적자본개발모델(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이다(Friedlander & Burtess, 1995). 대체로 이 두 가지 모델은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Ideal)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모델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특성을 보다 강조하는가에 따라 노동력연결모델(LFA)과 인적자본개발모델(HCD)(김종일, 2000), 그리고 두 모델의 혼합모델(Murphy & Johnson, 1998)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노동력연결모델은 짧은 시간 안에 복지수급자를 일반 노동시

장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수급보다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면서 이는 향후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상승을 가능케 한다고 여긴다(Brown, 1997). 이러한 노동력연결모델은 복지수급자에 대해 취업상담이나 취업지원서비스,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용이토록 하고, 운영비용에 있어서는 다른 모델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지나친 취업유도의 결과 단순 저임금 직종에 머물러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이홍직, 2004; 김종일, 2000). 이에 반해 인적자본개발모델은 긴 시간동안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기술수준이 높고 안정적이며 전망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추구한다(Hamilton et al, 1997). 하지만 노동력연결모델에 비해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으나 인적자본개발모델 선호자들은 이러한 투입이 궁극적으로 복지의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로 보고 있다(김종일, 2000).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 근로연계복지모델은 단지 노동력연결모델이나 인적자본개발모델 중의 하나에 집중하기 보다는 두가지 모델의 특성이 적절히 혼용된 혼합모델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Murphy & Johnson, 1998)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인적자본개발모델과 노동력연결모델의 이상적(ideal) 성격으로 인해 실제로는 두 모델의 특성을 혼합하여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 운용된다는 것이다(신동면, 2004).

이러한 근로연계복지모델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취업구직활동과 같은 저비용 단순사업 위주였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JOBS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을 강조하는 인적자본개발(HCD)모델의 특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조기취업을 강조하는 노동력연결(LFA)모델로 전환되었고, 현재에는 PRWORA로 인해 노동력연결모델에 강제성이 부가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자발적 노동력연결모델에서 출발하여 자발적 인적자본개발모델, 강제적 노동력 연결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일, 2000). 따라서 근로연계복지모델은

노동력연결모델과 인적자본개발모델의 두 가지 유형에 자발성과 강제성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4가지 유형, 즉 강제적 인적자본개발모델과 강제적 노동력연결모델, 자발적 인적자본개발모델과 자발적 노동력연결모델에 이리한 모델의 성격이 적절히 뒤섞여 있는 혼합모델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연계복지모델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근로연계복지모델의 유형

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 또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근로연계복지모델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노동력연결모델의 특성을 강조한 사업형태를 생각해 보면 장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교육훈련실시보다 일정 능력 이상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부 보조원 또는 일반 취업을 조기에 유도할 수 있다. 즉 노동력연결모델의 단기간, 저렴한, 그리고 취업과 관련한 집중지원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인적자본개발모델 특성을 강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193

조한 형태는 장기간 동안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충분한 교육실시로 실제 업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부 보조원 또는 일반취업을 할 수 있다. 이는 노동력연결모델에 비해 교육기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비용과 참여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연결모델과 인적자본개발모델의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혼합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을 탈피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어떠한 근로연계복지모델적 특성이 더 효과적인지 실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 탈피에 효과적인지와 관련해서 근로연계복지모델 유형보다는 각각의 모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로연계복지모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초기 근로연계복지모델관련 연구들은 그 당시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중 1970년대의 WIN(Work Incentive)을 노동력연결모델로, 1980년대의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를 인적자본개발모델로 규정하고 각각의 성과를 비교하였다(Hagen, 1995). 연구 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빈곤계층 취업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나(Orthner & Kirk, 1995) 세부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의 모델로 구분짓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PRWORA 이후 본격적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적자본개발모델보다는 노동력연결모델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혼합형 모델이 빈곤계층 취업에 대한 성과가 컸다고 제시된다(이홍직, 2004).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대한 직접적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자활관련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4) 우선 자활사업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능력 간에 차

4) 물론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활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제적 자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활사업 관련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자활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가 없을 때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이나 참여자 소득이 높았다(손능수, 2005; 강남식 외, 2002; 엄태영, 2004). 즉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업무가 자신에게 적절한 경우 자활의 정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업무적절성은 자활사업 참여과정 중 충분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실제 업무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자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자활사업 운영에 있어 참여자에 대해 강제적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민주적 운영방식이 자활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배치과정에서 참여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경우일수록, 그리고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가 부여되는 경우 자활의욕이 상승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강남식 외, 2002). 따라서 자활사업 운영과정에서 각종 강제성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지침 내부에는 참여자에 대한 사업 참여기간 제한여부가 없으나, 지역자활센터 차원에서 한 사업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참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여기한 제한여부를 두고 있다. 결국 근로연계복지모델상의 강제적 특징을 반영하는 참여기간 제한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 참여기간 등이 실제 자활사업 탈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자활사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오, 1997).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연구(강남식 외, 2002)와 자활공동체 관련 연구(엄태영, 2004)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업무관련 능력이 실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인가가 주요한 자활성공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더라도 자활교육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활의지 고양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이 자활교육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활사업에 있어

서 교육은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을 직접 측정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체로 교육과 관련한 측정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교육시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비 투입액수 등의 내용을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손능수, 2006)으로 나타났고, 1인당 교육비액수 또한 실제적 자활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엄태영, 2009).

결론적으로 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들 속에서는 인적자본개발모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높은 교육정도가, 그리고 강제성과 자발성 중에는 자발적 특성이 실제 자활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의 형태 속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실증해볼 필요가 있다.

2. 자활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탈피여부를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인 자활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활의 개념은 복잡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⁵⁾ 먼저 광의의 자활개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중산층으로 진입함으로써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Hawkins, 2002) 또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통해 복지수급에서 탈피한 경우(박경숙·박능후, 2001)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협의의 자활개념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근로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경제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스스로 욕구충족이 가능한 경우

5) 자활의 개념은 대체로 빈곤탈피라는 결과적 측면과 이를 위한 과정적 측면이 다루어지면서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설정될 수 있으나(Hawkins, 2002; 이상록, 2003)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활 의미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의 개념만을 다룰 것이다.

(Freeman, 1997)이거나 자활사업 참여로부터 벗어나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황(강철희, 1997)을 의미한다. 하지만 협의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처럼 복지수급으로부터 완전 탈피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의 자활개념인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자활사업 탈피를 자활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활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Rebecca, 2000). 먼저 연령은 자활에 대해 부(-)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활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자활이 어려워졌다(김교성, 2002; 김교성 외, 2003; 김영미, 2002; 임태영, 2009). 또한 현재 복지수급자인지 여부가 자활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복지수급을 단기간 받았을수록 자활가능성이 높았고(Zedlewski, 1999) 복지수급자는 빈곤탈피 이후에도 복지수급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김교성 외, 2004), 그리고 복지수급자가 아닌 경우 일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태영, 2009) 등은 복지수급여부를 자활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낮은 학력도 자활에 대한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단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여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이 빈곤여성관련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박경숙 외, 2001; 김수현, 2001; 장하진 외,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활탈피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과 복지수급여부, 학력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형태인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197

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증하여 향후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형태의 자활사업에 대해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1.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 정도는 지역자활센터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인가?

연구 질문2.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개인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3.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개인차원 및 지역자활센터차원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 간 상호작용효과는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자활센터 중 자료수집에 동의한 30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 여성 347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먼저 1차적으로 2008년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및 기관용 설문지를 우편으로 조사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차원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사후 전화조사로 보완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각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자활사업을 탈피하였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분석방법은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2.0을 통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198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집

자 개인요인과 지역자활센터 조직요인 검증에 위해 HLM 6.0을 통하여 다층분석(Multi 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조직이라는 상이한 분석단위(Unit analysis)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단위의 분석에 대한 통합적 수행⁶⁾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표 1>과 같다. 특별히 근로연계복지모델의 양 극단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본개발모델과 노동력연결모델로 구분 짓는 특성으로 자활사업에서의 교육정도와 참여기간,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정도를, 자발성 및 강제성과 관련한 특성으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대한 제한여부로 보았다. 우선 교육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교육만족도와 업무적절성, 투입된 교육비 액수를 변수로 설정하였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적절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교육비 투입액수가 많은 경우는 자활사업 내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기간의 경우에 자활사업 탈피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함으로써 단기적 접근인지 장기적 접근인지를 확인하였다. 노동력 연결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취업지원서비스 변수의 경우 자활사업 탈피를 위해 취업이 용이도록 기관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자발성과 강제성의 구분을 위한 참여기간 제한여부 변수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기간 제한여부를 두고 있는 경우 강제적 참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6) 기존의 분석방법들은 동일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공통되는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의 기본가정인 관측치의 상호 독립성이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과소 추정하여 결국 제 1종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지만 다층분석은 동일 집단의 개인은 다른 집단의 개인들에 비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개인과 조직의 잔차를 따로 추정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홍세희, 2007).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199

물론 위의 변수들은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지만,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변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연구의 제한점이다.

<표 1> 주요변수 및 측정방법

변수	변수명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자활사업탈피	자활사업탈피란 자활근로사업을 벗어나 교육부 보조원 취업 또는 일반 개별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측정방식으로 자활사업 탈피를 1, 자활사업 재참여를 0으로 설정하였다.
	학력	최종 교육 년수를 측정하였다
통제변수	수급자 여부	수급자는 0으로써 차상위계층 및 일반은 1로 측정하였다
	나이	생년월일 기입을 통해 측정하였다.
개인요인	교육만족도 ⁷⁾	교육만족도란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동안 이수한 교육에 대해 참여자가 어느정도 만족하는지를 의미한다. 측정을 위해 Hudson(1997)의 CSI(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설문내용 중 연구대상에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8문항을 활용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	업무적절성이란 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정도 적합한지를 의미한다. 측정을 위해 임태영(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가 자신에게 적절함을 나타낸다.
독립변수	참여기간	참여기간이란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고, 참여 개월수를 측정하였다.
	참여제한여부	참여제한여부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을 별도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참여제한기간이 없는 경우 0, 참여제한기간이 있는 경우 1로 측정하였다. 참여제한기간이 없는 경우 자발적인 사업운영을, 참여제한기간이 있는 경우 강제적인 사업운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요인	교육비액수	교육비 액수란 2008년도 지역자활센터의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예산 중 각종 교육에 사용한 액수를 사업단 참여인원으로 나눈 1인당 교육비 액수를 의미한다.
	취업지원서비스정도	취업지원서비스정도란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 희망취업처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협조요청,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지원을 실시한 정도를 의미한다. 세부 측정은 통합교육사업 담당자 1인에 대해 모든 취업희망 참여자에 대해 실시한 경우(=4), 일부를 제외하고 취업희망자에 실시한 경우(=3), 일부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한 경우(=2),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1)로 나누어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은 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측정의 한계로 인해 이를 서열 아닌 중간화하였다.

7)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육만족도(Hudson, 1997)는 ①내가 이수한 교육은 지금 나의 업무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②나는 추가적인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200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집

IV. 연구결과

1.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표 2> 와 같다.

<표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수급여부(N=320)	수급	253	79.1	비수급	67	20.9
	중졸	19	5.7	고졸	244	73.5
학력(N=332)	전문대졸	28	8.4	대학재학	19	5.7
	대졸	20	6.0	대학원재학이상	2	0.6
	6개월이하	37	11.3	7~12개월	59	17.9
참여기간(N=331)	13~18개월	37	11.3	19~24개월	62	18.8
	25~30개월	36	10.2	31~36개월	45	13.7
	37~42개월	31	9.4	43개월이상	24	7.4
	30세이하	10	2.9	31~35세	22	6.3
연령대(N=347)	36~40세	71	20.5	41~45세	139	40.1
	46~50세	72	20.7	51세이상	33	9.5

먼저 조사대상의 79.1%가 수급자였고, 학력은 고졸이 244명으로서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대는 전체의 40.1%인 139명이 41~45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1.73세였다.

- 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을 것이다③나는 교육에서 보조원 활동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④나는 보조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교육을 추천할 것이다⑤내가 받은 교육들은 내가 절실히 필요했던 교육 이었다⑥교육을 받은 지금, 처음보다는 훨씬 보조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편하다⑦내가 받은 교육은 매우 가치가 있다⑧여기서 받은 교육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 이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업무적절성(엄태영, 2004)은 ①현재 내가하고 있는 보조원 업무는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기술을 필요로 한다②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보조원 업무에 필요한 기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③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보조원 업무는 내가 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으로 어려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④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지금 하고 있는 보조원 업무는 배우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201

이와 함께 <표 3> 과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연계복지모델관련 특성으로는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그동안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전체의 18.8%인 116명이 19개월부터 24개월까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평균 참여기간은 약 26.1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 기간 중 받았던 다양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으로써 보통 이상의 만족수준을 나타냈으며 업무적절성과 관련해서는 평균 4.02로써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자신의 능력수준에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연계복지모델관련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Cronbach- α)
교육만족도(N=347)	3.77	.613	.923
업무적절성(N=347)	4.020	.632	.780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24.5%인 84명이 자활사업을 탈피하여 2009년부터 1월부터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와 같다.

<표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상황

취업상황	명수(%)	취업상황	명수
취업 ⁹⁾	84명(24.5%)	자활사업 재참여	222명(64.5%)
과약불가	38명(11.0%)		N=344

- 9) 취업 시기는 2008년 12월 말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되자마자, 2009년 3월말 제 2차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취업된 경우를 말하며 취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총 84명 중 교육부보조원이 71명, 개별 취업이 8명, 기관 내 바우처 사업 참여가 5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별취업과 바우처 사업 참여는 교육부 보조원으로서의 취업보다는 긍정적 성과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탈피를 중점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분석방법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 모든 내용을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탈피로 정의하였다.

202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집

2. 지역자활센터의 특성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1인당 교육비 투입액을 살펴보면 20만원~40만원과 40만원~60만원이 각각 전체 기관의 30%인 10개소씩이었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여부의 경우 19개 기관이 참여제한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지원서비스 정도는 4점 만점에 2.85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 내용은 <표 5> 와 같다.

<표 5> 지역자활센터 기관특성

구 분(N=30기관)		빈도 (기관)	백분율 (%)	평균 (M)	표준편차 (S.D)
1인당 교육비 투입액	20만원미만	3	10.0	553.5 천원	295.9
	20만원이상 40만원미만	9	30.0		
	40만원이상 60만원미만	9	30.0		
	60만원이상 80만원미만	3	10.0		
	8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4	13.3		
	100만원이상	2	6.7		
참여기간 제한여부	참여제한기간 있음	19	63.3	-	-
	참여제한기간 없음	11	36.7	-	-
취업지원 서비스정도	-	-	-	2.85	0.38

3.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개인, 조직요인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참여자 개인요인과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연계복지모델 요인으로 나누어 탐색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활용하였다. 다층모형분석은 일반적으로 4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무조건적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을 통해 지역자활센터간의 변량을 추정하여 다층모형 적용이 적절한지를, 또한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한다. 2단계로는 무조건적 기울기모형(Unconditioned Slope Model)으로써 연구모형 내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요인을 투입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203

하고 이 요인들이 어느 정도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 내에서 조직변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과 고정미지수로 설정해야 하는 요인을 구분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 개인특성 변수를 고려한 채 조직변수를 투입하여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게 된다. 4단계는 조건적 기울기모형(Conditioned Slope Model)으로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개인요인 및 조직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다(임정기, 2005; 신은경, 2006; 김동기, 2007; 임태영, 2009). 또한 본 연구는 다른 모형과는 달리 자활사업 탈피라는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화된 위계모형(Generalized Hierarchical Models)을 사용하였고 Bernoulli 확률분포를 따랐다(Bryk, Raudenbush & Condon, 1996; 홍세희, 2007).

1) 지역자활센터에 따른 자활사업 탈피정도 차이 검증

지역자활센터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탈피정도가 차이날 것이라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을 위해 무조건적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지역자활센터 간 변량을 추정¹⁰⁾함으로써 다층모형 적용가능성 여부와 종속변수에 대한 개인과 지역자활센터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주게 된다(Bryk et al, 1996). 구체적인 분석모형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 (Level-1 Model)

$$\text{Prob} (Y=1 | B) = P$$

$$\log [P / (1 - P)] = B_0$$

조직수준 (Level-2 Model)

$$B_0 = G_{00} + U_0$$

10) 본 연구의 모든 추정방법은 REML(restricted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REML방법은 분석자료의 표본 수가 적거나 Level-2의 수가 적은 경우 덜 편의된 추정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07).

P를 확률이라고 할 때,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을 탈피할 확률 1, 탈피 못할 확률 0의 승산에 대한 자연로그 값의 평균이 각 조직별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인 B0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인 B0은 전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인 G00과 지역자활센터 조직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 정도 차이인 U0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U0가 유의하게 되면 지역자활센터마다 자활사업 탈피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무조건적 평균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값	승산비
절편, G00	-0.862	0.163	-5.30***	0.422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Chi-square	
절편, U0	0.55	0.302	47.65*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무조건적 평균모형 분석결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무선효과(U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므로(p<0.05)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탈피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간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다층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 탈피 정도의 총 분산은 자활사업 참여자(level 1)의 분산과 지역자활센터(level 2)의 분산으로 구성되고, 총 분산 중 조직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집단 내 상관계수(ICC :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Level 1에 대한 분산(Variance)은 로지스틱 함수의 분산인 ($\pi^2 / 3$) 을 사용하게 된다(홍세희, 2007). ICC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에 대한 총 분산 중에 조직수준이 8.42%를, 개인수준이 91.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는 지역자활센터 조직효과가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에 대한 총 분산 중 약 8.5%를 설명하

11) ICC = 0.302 / {0.302 + ($\pi^2/3$)}

고 있는 것이다.

2)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검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검증은 무조건적 기울기모형(Unconditional Slope Model)으로써 연구모형 내에 참여자 개인특성관련 변수들을 삽입한다. 이는 참여자의 어떠한 개인요인이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모형으로 [연구문제 2] 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수식¹²⁾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1 Model)

$$\text{Prob}(Y=1 | B) = P$$

$$\log [P/(1-P)] = B0 + B1*(학력) + B2*(수급여부) + B3*(연령) + B4*(교육만족도) + B5*(업무적절성) + B6*(자활참여기간)$$

조직수준(Level-2 Model)

$$B0 = G00 + U0$$

$$B1 = G10 + U1$$

$$B2 = G20 + U2$$

$$B3 = G30 + U3$$

$$B4 = G40 + U4$$

$$B5 = G50 + U5$$

$$B6 = G60 + U6$$

여기서 B0는 지역자활센터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여부에 대한 로짓 평균이고, B1부터 B6까지는 각 변수의 회귀계수를 의미하며, G00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여부에 대한 로짓평균을, U0는 자활사업 탈피여부에 대한 조직의 고유효과로 조직간 자활사업 탈피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10에서 G60은 보편적인 다중회귀분석과 동일한 고정효과(fixed effect)모수를, U1에서 U6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해

12) 독립변수 투입과정에서 모형에 포함된 절편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집단평균중심화(Group mean centering)과정을 거쳤다.

당 변수에 대한 조직간 차이를 의미하고 있다. 우선 <표 7> 은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무선효과 검증의 결과이다.

<표 7>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무선효과 검증

무선효과	표준편차(S.D)	분산	Chi-square
절편 U0	0.477	0.228	28.557*
학력 U1	0.181	0.033	24.534
비수급자 U2(ref.수급자)	0.572	0.327	18.387
연령 U3	0.043	0.002	21.648
교육만족도 U4	0.381	0.145	25.013#
업무적절성 U5	1.272	1.619	29.543*
자활참여기간 U6	0.015	0.001	26.672#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만족도, 자활사업 참여기간이(p<0.1), 업무적절성(p<0.05)이 자활사업 탈피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상호작용효과 검증 시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개인요인들은 고정미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요인 상호작용효과 검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조직요인 간의 상호작용 검증모형은 조건적 기울기모형(Conditional Slope Model)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근로연계복지모델의 자활사업 탈피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참여자 개인요인 중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변수인 교육만족도와 업무적절성,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지역자활센터 조직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자활사업 탈피여부에 대한 관련성이 지역자활센터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3] 을 실증¹³⁾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식은 아래와 같다.

Level-1 Model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207

$$\text{Prob}(Y=1 | B) = P$$

$$\log [P/(1 - P)] = B0 + B1*(학력) + B2*(수급여부) + B3*(연령) + B4*(교육만족도) + B5*(업무적절성) + B6*(자활참여기간)$$

Level-2 Model

$$B0 = G00 + G01*(참여제한) + G02*(1인당교육비) + G03*(취업지원) + U0$$

$$B1 = G10$$

$$B2 = G20$$

$$B3 = G30$$

$$B4 = G40 + G41*(참여제한) + G42*(1인당교육비) + G43*(취업지원) + U4$$

$$B5 = G50 + G51*(참여제한) + G52*(1인당교육비) + G53*(취업지원) + U5$$

$$B6 = G60 + G61*(참여제한) + G62*(1인당교육비) + G63*(취업지원) + U6$$

이 식에서 G41, G42, G43, G51, G52, G53, G61, G62, G63은 개인요인과 조직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이고 U4, U5, U6은 그 변수에 대한 각 지역자활센터 고유효과¹⁴⁾를 의미한다. 나머지 무선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던 개인변수들은 고정미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에서 개인수준에 대한 고정효과 분석결과 학력(+), 수급여부(+), 연령(-), 업무적절성(+), 최초 자활사업참여시기(+)¹⁵⁾가 통계적으로 자활사업 탈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닐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인지할수록,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자활사업 탈피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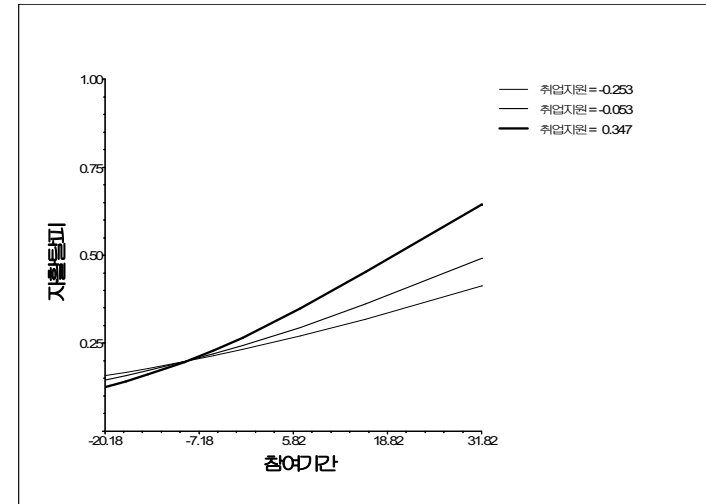
13) 상호작용은 무선효과가 검증된 교육만족도와 업무적절성,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대해 조직변수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절편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개인변수는 집단평균중심화(Group mean centering)를, 조직변수는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을 하였다.

14) 다층자료분석에서 자료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30개 이상의 조직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Kreft & Leeuw, 1999). 아울러 다층자료분석이 회귀분석의 연장이라고 보았을 때 회귀분석 시 자료의 크기가 최소 독립변수의 10배인 것이 요구된다(이익섭·이윤로, 2004).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 30개소를 측정하였으므로 3개의 조직변수를 활용하였고, 분석결과 회귀계수를 초과하는 표준오차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분석은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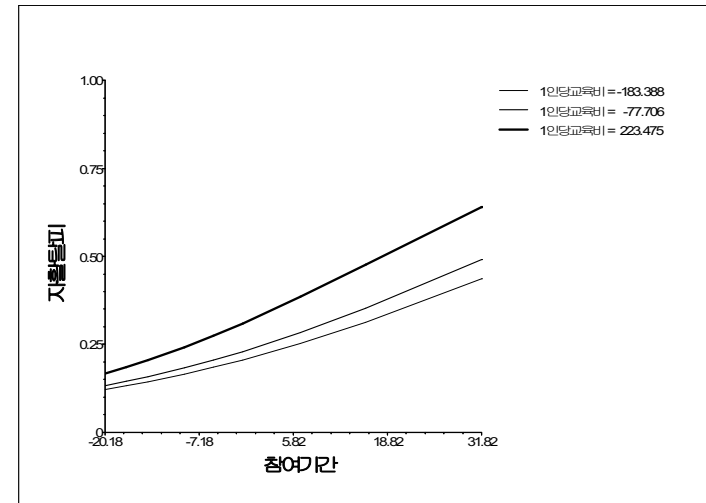
또한 조건적 기술기모형 분석결과 조직요인의 주효과와 관련해서는 1인당 교육비가 많을수록 $p < 0.05$ 수준에서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제한여부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도는 자활사업 탈피에 대해 주효과로서 통계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요인과 조직요인간의 상호작용 검증에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간($p < 0.05$),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1인당 교육비 수준 간($p < 0.1$) 상호작용효과가 자활사업 탈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9> 와 같다.

아래 [그림 2] 는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지역자활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정도에 따라 자활사업 탈피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도가 총 31개 지역자활센터 중 25%, 50%, 75%에 해당되는 기관의 참여자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자활사업 탈피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늘수록 자활사업 탈피가능성은 증가하였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기관에 속한 참여자일수록 그 정도는 커졌다. 또한 [그림 3] 은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1인당 교육비 지출 액수에 따라 자활사업 탈피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인당 교육비 지출액수가 총 31개 지역자활센터 중 25%, 50%, 75%에 해당되는 기관의 참여자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자활사업 탈피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자활사업 탈피가능성은 증가하였고, 1인당 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속하는 참여자일수록 그 정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3]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1인당교육비 액수간의 상호작용 효과



<표 9>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개인, 조직요인, 상호작용효과 검증

고 정 효 과	모형1			모형2			모형3					
	(기초모형)			(무조건적기술기모형)			(조건적기술기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승산비
개인수준 변수												
절편 G00	-0.862	0.163	-5.30***	0.422	-1.234	0.173	-7.145***	0.291	-1.413	0.287	-4.927***	0.243
학력 G10					0.388	0.131	2.958**	1.473	0.405	0.138	2.941**	1.500
비수급자 G20(Ref.수급자)					1.022	0.335	3.054**	2.78	1.106	0.375	2.945**	3.022
연령 G30					-0.068	0.024	-2.816**	0.934	-0.067	0.025	-2.674**	0.935
교육만족도 G40					-0.045	0.259	-0.173	0.956	-0.136	0.404	-0.336	0.873
업무적절성 G50					0.843	0.382	2.208*	2.323	0.978	0.869	1.126	2.660
참여기간 G60					0.030	0.007	4.321***	1.031	0.031	0.012	2.660*	1.031
조직수준 변수												
참여제한여부 G01									0.189	0.400	0.473	1.208
1인당교육비 G02									0.001	0.001	2.219*	1.001
취업지원서비스 G03									0.316	0.496	0.637	1.371
상호작용												
교육만족도x 참여제한여부G41									0.279	0.513	0.543	1.321
교육만족도x 1인당교육비G42									0.001	0.001	0.387	1.001
교육만족도x 취업지원서비스G43									0.067	0.711	0.094	1.069
업무적절성x 참여제한여부G51									-0.230	0.958	-0.240	0.795
업무적절성x 1인당교육비G52									-0.001	0.002	-0.435	0.999
업무적절성x 취업지원서비스G53									-1.429	1.201	-1.189	0.240
참여기간x 참여제한여부G61									0.010	0.012	0.847	1.010
참여기간x 1인당교육비G62									0.001	0.001	1.715#	1.001
참여기간x 취업지원서비스G63									0.039	0.018	2.128*	1.040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21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참여자 개인특성과 근로연계복지 모델적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지역자활센터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조직수준에서 자활사업 탈피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복지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가 자신의 능력에 적절하다고 인지할수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사업 탈피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활사업 탈피와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마다 차이를 나타내는 개인특성 변수로는 모두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인 교육만족도와 업무적절성, 자활사업 참여기간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연계복지모델특성변수와 상호작용 검증 실시하였다. 상호작용분석결과 먼저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 중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 1인당 교육비 투입액수가 주효과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남에 따라 자활사업 내에 투입한 1인당 교육비가 많을수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의 결과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1인당 교육비 간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사업 탈피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지만,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의 1인당 교육비 투입액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한 취업지원서비스 정도가 높을수록 그 가능성은 보다 커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수급자일수

록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부의 부족한 근로유인제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현실적인 참여형태가 마련해야 하겠고, 자활사업 탈피가 곧바로 수급자 탈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 정도 수급자 탈락 유예기간을 보장시켜 주면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과도한 가계지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급자 탈피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은 자활사업 참여기간 동안 야간대학 진학이나 학점은행제 참여 등을 통하여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제공 및 재정적 지원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활사업 탈피의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자활의 걸림돌로서의 연령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40대 여성이라는 점(엄태영, 2009)에서 높은 연령의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과 자활사업 탈피의 목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목표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근로연계복지모델의 개인적 특성 중 교육영역과 관련해서는 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업무적절성이 자활사업 탈피의 주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의 적성과 자활사업이 부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활사업 과정 중 참여자들이 이수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충분한 교육제공을 통해 자활사업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기술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케 하고, 결국에는 자활사업에서 탈락하지 않고 긍정적 탈피를 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높았다는 부분도 자활근로사업 본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측면이다. 즉 자활사업 탈피는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과 실습을 거

친 이후 용이함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짧은 자활사업 참여기간보다는 충분한 참여기간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연계복지모델과 관련한 특성에서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의 1인당 교육비 지출액수가 많을수록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이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양이 자활사업 탈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¹⁵⁾. 따라서 현행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예산 중 사업비 지출한도인 20%¹⁶⁾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상당액이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사업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면 1차적으로 축소시켜야 하는 영역이 바로 교육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과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우선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1인당 교육비 지출액 간에 자활사업 탈피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사업 탈피 가능성은 높아졌고, 참여자가 속한 지역자활센터의 1인당 교육비 지출액수가 높을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탈피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자활사업 참여 보장과 그 기간 동안의 많은 교육

15) 교육비 지출액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취업지원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인적자본개발모델이 노동력연결모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비의 경우 정량적 측정이 이루어졌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측정의 어려움으로 실무자의 인지정도인 정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변수를 동일한 차원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16) 사업비 지출한도 20%이하란,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초과해야 하고 사업비는 20%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인건비의 경우 지급금액과 근로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인건비는 줄일 수 없고, 사업비를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지역자활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정도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결과는 효과적인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서 인적자본개발모델 형태를 기본적으로 취하되 취업지원서비스라는 노동력연결모델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즉 짧은 시간 내에 자활사업 탈피추구 보다는 충분한 교육비 투입과 오랜 시간동안의 적절한 교육과정 참여를 거치면서 자활사업 탈피준비가 되었을 경우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기간 제한과 관련한 변수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자발성과 강제성의 부분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자활사업 탈피에 보다 효과적이지는 알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이외의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활사업 탈피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 전반에 대해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 탈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탈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활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주제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임으로 자활사업 탈피의 결과만을 다룬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적 접근을 통해 자활사업 탈피의 과정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연계복지모델과 관련하여 각 지역자활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형화 연구도 자활사업에 대한 풍부한 실천적, 정책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참여자 개인과 자활공동체,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등의 다층구조를 다룸으로써 자활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3-50.
- 강철희, 1997,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31, 87-118.
- 교육인적자원부, 2002, 『특수교육실태조사서』.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김교성·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5-32.
- 김동기, 2007,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 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방안: 성동구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미, 2002,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 2000, “미국의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에서의 ‘노동시장연결’ 모델과 ‘인간자본개발’ 모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1, 119-146.
- 박경숙·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 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안내』.
- 손능수, 2005, “자활사업 수혜자 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295-320.
- , 2006,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비교분석 : 대구지역의

근로중점형과 시장지향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0, 123-149.

신동면, 2004, “영국의 근로복지연계에 관한 평가 : 신노동장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 23-43.

신명호, 2007, “근로연계복지제도로써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특징”, 『도시와 빈곤』, 84, 69-92.

신은경, 2006, “장애인 사회참여와 개인 및 지원환경요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HLM을 이용한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현욱·나성식·조윤경, 2005, “장애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에 대한 질적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393-418.

엄태영, 2004,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에 대한 개인 및 지역자활센터 조직요인 연구 -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이익섭·이윤로, 2004, 『사회복지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이홍직, 2004, “미국빈곤여성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2), 59-90.

임정기, 2005,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조직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하진 외, 2001, 『성주류화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연구』, 서울 : 한국여성연구소.

정원오, 1997, “저소득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

자활사업 탈피 영향요인으로서의 개인 및 근로연계복지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 217

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6, 『2006년 정기총회자료집』.

홍세희, 2007, 『위계적, 종단적 자료에 대한 다층모형. 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시리즈 II 자료집』.

Brown, A., 1997, Work First : How to Implement an Employment-Focused Approach to Welfare Reform. NY :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Bryk, A. S., Raudenbush, S. W., & Congdon, R. T., 1996,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with HLM/2L and HLM/3L Programs.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Freeman, Edith M., 1997, Welfare Reforms and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 Setting a New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Agenda. p 269 in Patricia, L., Ewalt, M., Freeman, S., Kirk, A., & Dennis, L. Poole, (ed). Social Policy : Reform, Research and Practice. Nasw Press.

Friedlander, D. & Burtless, G., 1995, Five Years After: The Long Effects of Welfare-to-Work Programs, NY: Russell Sage Foundation.

Hagen, J. L., 1995, Jobs Program, in NASW(ed),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C.: NASW Press.

Hamilton, G. et al., 1997, The National Evaluation of Welfare to Work Strategies : Evaluating Two Welfare to Work Program approaches : Two year Findings on the Labour Force Attachment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Programs in Three Sites. Washington, D. C. :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Health and Human Services.

Hawkins, R. L., 2002, “How Low 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Ph.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YR Publishing Company.

Kreft, I. G. G., & Leeuw, J. D., 1999, Introducing Multilevel Modeling, London : Sage.

Murphy, G., & Johnson, A., 1998, What works: Integrating Basic Skills Training into Welfare to work, <http://aspe.hhs.gov/hsp/fixingschange99/index.htm>.

Orthner, D. K., & Kirk, R. S., 1995, Welfare Employment Programs: Evaluation, in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 (ed.),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C. NASW Press.

Rebecca, Y. K.,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receiv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Social Work Research, 24(4), 211-222.

Zedlewski, S. R., 1999, Work-Related Activiti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Welfare Recipient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Discussion Paper No. 99-06,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Work Program Predictors of Escape from Self-Sufficiency Programs : A Case Study of Seoul, Incheon, and Kyounggi Province

Um, Tae-young
(Mok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edictors of participants' escape from self-sufficiency programs.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used for the analysis. A total of 347 people in 30 center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fixed effects indicate that the potential for escape would be greater for people who are not welfare recipients, have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re younger, consider their duties as appropriate, and take part in self-sufficient program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s' organizatio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escape suggests that the probability of entering into a profession will increase as the training cost per person becomes higher. With respect to the period of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conditional slope model suggest that the possibility of escape will rapidly increase as the training cost per person becomes higher and as work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the length of program participation becomes more prevalent. This study suggests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cape from

self-sufficient programs.

Keywords : Self-sufficiency, Welfare to work program,
Para profession,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Hierarchical linear model.